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

백종국(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문초록

이 논문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한국기독교정치학자”라는 영역으로 축소시켜 다루고 있다.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의 교차라는 관점으로 보고 각각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책임을 축차적으로 다루었다. 사회적 책임의 혁명, 칼빈주의 세계관, 하나님의 성품, 복음적 분업, 복음의 역사성 등이 이러한 분석의 도구와 과제로 활용되었다. 분석의 결과로서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실천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정직한 탐구 활동, 한반도 평화, 민주체제의 정착, 공평한 분배의 실현 등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행동들이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역사적 실천으로 강조되었다. 결론에서 한국기독교정치학자가 겪을 수 있는 계도화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고 있다.

주제어 : 한국기독교정치학자, 사회적 책임, 칼빈주의 세계관, 복음의 역사성, 계도화

- I. 서론: 사회적 책임의 혁명
- II. 기독교정치학자란 누구인가?
- III. 세속적 차원: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
- IV. 신앙적 차원: 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
- V.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역사적 책임
- VI. 결론

I. 서론 : 사회적 책임의 혁명

최근 국제 사회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역동성을 겪고 있는 중이다.(전병길·고영, 2009). 불과 얼마 전까지 소수의 시민단체들이 윤리적 목표로서 강조해왔던 구호가 이제는 많은 영역에서 보다 제도화되고 실천적인 목표로 정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혁신의 산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일종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장원, 2006). 국제연합에서는 2천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21세기 밀레니엄 협약을 진행 중이고, OECD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중이며, 국제표준화기구는 사회적 책임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국제적 NGO들은 국제적 사업장 인증제도를 추진 중이다. 소위 이해당사자 모델(stakeholder model)과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model) 사이의 제도적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데, 이미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SRI)" 비중이 13%를 돌파하고 있다(이장원, 2006: 4).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도 사회적 책임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성서한국대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라는 주제 하에 목회신학·시민사회·심리상담·법

조·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언론·통일 등 15개 분과로 나뉘어 소규모 영역별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이 대회에는 많은 기독교민단체들과 교회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구체적 삶에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각자의 주제에 맞추어 토의하고 헌신을 다지는 계기를 가졌다.

사회적 책임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삶의 주제 중 하나로 간주되어왔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이 수반된다. 보통 "칭지기 사상"과 "빛진 자 사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김세윤, 2001: 113). 전자의 경우에는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숙명으로서의 책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어있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김광열, 2003: 210).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철학적 기반을 가진 자본주의가 극성에 이르는 이 시기에 도리어 사회적 책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한국기독교정치학자"라는 매우 좁은 영역으로 최대한 축소시켜 다루는 데 있다. 정치학자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직업 영역 중 하나이다. 그들은 정치 분석을 통해 정치적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고 정치적 공동체의 미래를 예측한다. 이들이 제안하고 정당화시킨 정책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기도 한다. 신앙적 기반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일 여기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겹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또 여기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불어 부과되면 어떤 역사성이 도출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를 다루는 연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이 차례로 검토하고자하는 바이다.

II. 기독교정치학자란 누구인가

"기독교정치학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현대의 주류적 학문 분위기 안에서 당혹스러운 것이다. 르네상스 이후 대체적인 학문적 태도의 경향은 학문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최대한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많은 주장들을 소개하겠지만 이성의 영역은 종교의 영역과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침범하는 경우에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왔다. 정치학자로서의 정체성은—그가 기독교도이든, 불교도이든, 이슬람교도이든—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보다 우선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근대 이전 로마 가톨릭에 의해 수많은 이성의 순교자들이 발생했었다는 과거를 돌이켜 볼 때 학문적 공동체의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실(fact)'의 문제와 '가치(value)'의 문제를 최대한 구분하려는 노력, 혹은 소위 '가치중립적(value-free)' 노력은 반드시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이 아닐지라도 과학적 공동체의 보편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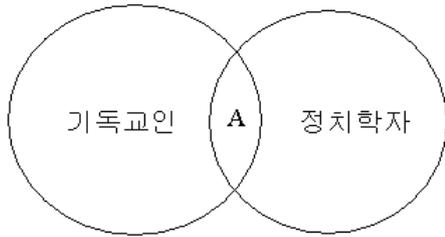
최대한 객관적 지식을 확보하려는 정치학자의 노력이 이성이나 경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으로부터 경험을 분리하여 경험에 인식론적 특권을 부여하는 연역주의 과학관이나 모든 이론들이 동등한 인식적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협약주의 과학관은 둘 다 건전하지 않다(이기홍, 2004). 그보다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의 실재를 인정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을 과학으로 간주하는 실재론적 과학관이 바람직하며 또한 실제 정치학계의 주류적 인식론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과학이란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얻기 위하여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앞으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 경우에 진실은 하나이므로 신앙이나 과학이 서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기독교인으로서의 학자란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1984년에 출

범한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탐구를 지속해 왔는데 현재 8백여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www.kcsi.or.kr). 이 학회는 기독교 학문과 세계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합연구학회』는 1992년에 『통합연구 합본호(통권 1~9호)』를 출간한 바 있는데 이 논찬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육학 등 4개 분야에 36명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통합연구학회, 1992). 이들은 대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우선적이지만 한국 교회의 이원론과 반지성주의를 개탄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학문적 소극주의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혹은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세계관, 창조과학, 지대공수론 등을 설파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독교세계관대학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학자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다루는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로버트 A. 다일이 제시한 정치의 정의를 확대해본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치학은 권력의 생성과 행사와 분배를 다루는 학문이고 정치학자란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치학자와 정치가의 차이는 마치 경제학자와 기업인처럼 학자와 실천가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피테의 비유를 빌리자면, 전자는 베어놓은 건초더미를 상대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살아있는 풀들을 상대하고 있다.

정의 ① 권력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는 기독교인
 정의 ②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그림 1> 기독교정치학자의 영역

정치학자라는 개념이 독자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정의도 독자 영역을 가지고 있다. 주후 2세기의 안디옥 교회 이후로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은 세상과 함께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그네들이다. 성령의 교제를 통해 각자가 부르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이 지상의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생의 천국이 보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김세윤, 2001: 128-29).

개념상으로 기독교정치학자란 이 두 가지 영역이 겹친 존재를 의미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처럼 기독교인과 정치학자는 각기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겹치는 A부분 또한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의 정의가 있다. 첫째는 좌측을 주체로 두고 우측 영역의 겹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특징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우측을 주체로 두고 좌측 영역의 겹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특징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의 ①과 정의 ②라 상정하면, 한국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에 후자가 더욱 적합한 정의이다. 즉 기독교정치학자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정의되어진다.

이 새로운 정의로부터 연역되는 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정치학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

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순수한 학문적 논의의 결과가 종교적 진제들과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치한다고 판명될 경우 우리는 매우 만족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처럼 겹치는 영역이 아닌 독립적 영역까지 조화로운 추론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독교가 이 두 영역이 분리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찾아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먼저 정치학계에서 진행되는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검토해 보자.

III. 세속적 차원 :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학문 연구자들이 취해야할 윤리적 책임 문제이다. 세속적 차원에서 학문 연구자들의 윤리적 책임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Smith et. al., 1976: 67).

첫째는 경험적(분석적) 차원이다. 학문의 연구자들은 연구의 과정에서 학문적 정직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미스가 소개한 사례들로서, 실험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피실험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한 밀그램 실험(Milgram experiment)이나, 자녀 학대의 문제를 야기했던 스키너 상자(Skinner's Box), 인종과 교육적 성취에 대한 열성학적 분석 결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존슨(Johnson)과 쇼클리(Shockley)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Smith 1976).

둘째는 규범적(처방적) 차원이다. 수많은 비윤리적 연구프로젝트들이 학문적 가치중립성이라는 허울아래에서 비윤리적인 국가 목적을 위해 실행되고 있다. 예컨대, 1965년 아메리칸 대학이 미국 국방부의 자금으로 진행했던 카멜롯 계획(Project Camelot)을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제3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내의 국가전복활동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었다. 매우 민감한 주제를 국방부의 지원으로 진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그 첫 번째 조사 대상 국가이었던 칠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 권위 있는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인 실버트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연구가 이 프로젝트의 "윤리성의 부재로 인해 토대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다(Silvert, 1965: 229)."

스미스의 분류에 따르면,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학 방법론의 발전은 네 단계로 나뉘어져있다(Smith et. al., 1976: 3). 주로 정치철학이 중심이었던 첫 단계를 지나, 제도분석의 단계로, 행태주의 단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후기행태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중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과 가장 부합하는 태도는 후기행태주의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스턴의 설명에 따르면 후기행태주의자의 신조(credo)는 다음과 같다(Easton, 1969: 1052). 첫째, 본질은 기술에 선행해야 한다. 둘째, 행태주의 과학은 경험적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경험적 연구는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의 영원한 주제이다. 다섯째, 정치학자들은 항상 지식인의 책임을 의식해야한다. 여섯째,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고 행동한다는 것은 사회의 재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학문의 정치화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다. 소위 "적실성(的實性 relevance)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태도는 학문과 종교의 융화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책임의 기준이 되는 가치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매우 조화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리적 기준을 무력화하려는 포스트모던주의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워낙 다양한 입장을 가진 집단이긴 하나 포스트모던주의를 "이론적 전체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식에는 어떠한 공통적 기초도 확립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해두는 것, 즉 모든 종류의 궁극적 기준들(master codes)를 해체하는 것"(Rosenau, 1992: 6)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입장은 그

자체로서 모순적이다. 포스트모던주의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논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해체의 기준조차도 주장할 수 없다. 만일 다수의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압자들의 목소리가 누리는 특권"을 거부한다면, 그들(피억압자들)의 목소리가 특별한 고려를 누려야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Rosenau, 1992: 175). 포스트모던주의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법칙"이 겪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후기행태주의의 적실성 강조는 정치학 분야의 방법론적 기초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어느 정치학자도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가치중립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들의 집단들도 자신들의 연구가 그 자체로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매우 보수적인 미국정치학회(APSA)조차도 학회의 윤리적 규칙에서 "진리"의 발견을 위한 "정직"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⁴⁾

정치학자는 지식의 증진이 가지는 가치와 존엄성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특별한 책임들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학자의 제일차적인 책임은 진실된 과정에 따라 진리를 발견하고 진술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치학자는 그들의 학자적 능력을 발전 증진시키는 데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식을 사용하고, 보급하고, 전달하기 위해 비판적 자기성찰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지식인의 정직성이 중요하다. 혹시 진실 탐구 이외의 부차적인 목적을 수행할 필요가 발생했는지라도, 이러한 고려 때문에 진실 탐구의 과정을 저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APSA, 1998: 5).

정치학자는 학자가 보기에 연구의 자유와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믿어질 때에는 연구의 제약조건들은 거부해야 한다. ... 또한 그 연구가 정보기관을 암호하거나 특정 정당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APSA, 1998: 8).

4) 아쉽게도 한국정치학회나 한국국제정치학회는 미국정치학회와 같은 윤리헌장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학자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진실의 발견과 이 발견의 과정에 있어서 정직성의 유지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제외하면 어떤 주제에도 학문적 양심에 의한 반대 없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예컨대, 한국정치학회는 "대의민주주의 발전"이 학회의 목표 중 하나라고 정관에서 선언하고 있는 데, 만일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한국정치학자들이 이 정관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다고 해도 진실과 정직이라는 정치학자들의 사회적 책임 선언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매우 잘 어울린다.

IV. 신앙적 차원 : 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

세속의 정치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정직'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정치학자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선언하던 하지 않던 간에 그들이 추구하는 기준이 전능자의 속성 중 일부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일부 근본주의적 기독교 종파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세속의 삶이 것처럼 저주받을 대상이고 세속의 모든 행위가 덧없는 것이라면 그 종파의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학자들은 적어도 사이비이거나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이다.

좀 더 체계적인 신앙과 학문의 이해를 위해 네델란드의 위대한 기독교정치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주류 중 하나인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 신앙과 학문이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네 가지 명제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칼빈주의는 그 원칙 상 학문적 정신을 요구한다. 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지성에 하나의 전포괄적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주는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는 돌 더미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밀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세워져 있는 섭리의 기념비이다(Kuyper, 2002: 139). 이를 탐구하는 지성의 존재는 이 섭리를 찬양하는 목적과 동일하다.

둘째로 칼빈주의는 학문을 하나의 영역으로 회복시켰다. 많은 신학자들과 달리 칼빈은 자연이 단순한 성경의 부속물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섭리의 책이라고 보았다. 자연의 원리를 연구하므로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그의 생각을 해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칼빈주의자는 잠시라도 다른 학문을 저급한 것으로 여겨 불신자의 손에 넘겨주고 신학과 명상에만 전념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Kuyper, 2002: 152)."

셋째로 칼빈주의는 학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칼빈주의가 초래한 두 가지 영역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첫째 영역은 제도이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고 공화적이다. 군주와 교회가 대학의 민주성을 압제하면 학문이 발전할 수 없다. 칼빈주의 운동은 국가와 교회에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므로 이들이 대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영역은 의식이다. 학문적 지식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낮으면 공급도 부진하기 마련이다. 칼빈주의 운동은 영역주권론을 통해 학문적 지식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넷째로 칼빈주의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원리의 갈등에 해답을 준다. 학문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원리들의 참여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신앙과 학문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학문적 체계 혹은 학문적 노력이 각자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대립한다(Kuyper, 2002: 161)." 카이퍼의 분류에 따르면 현재의 우주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상론자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비정상론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칼빈주의는

명백하게 후자의 입장에 서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로 종결된다.

제임스 사이어의 세계관 논의는 카이퍼의 이러한 설명을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사이어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관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다 (Sire, 1994: 32). 이 정의를 기초로 학문에 대한 두 가지 신앙적 명제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둘째 명제, 학문은 예배 행위이다. 이러한 방식의 세계관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학문의 기저에 깔려있는 전제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학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전제들을 제공해주고, 학문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통일성을 공급해준다(전광식, 1995).

자연 섭리에 대한 탐구로서의 학문을 인정한다고 해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실로 각 시대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대 기독교에서 있어서 이는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스토틀트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미국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발달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다(Stott, 1985).

스토틀트의 정리에 따르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 기독교는 한동안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하는 근본주의적 신앙운동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다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칼 헨리의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1947년 저서가 이러한 각성을 촉발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저서 이후 1966년에 개최된 미국 세계선교회의가 회의의 종료 시에 휘튼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모든 선교사들이 인종의 평등성과 인간의 자유, 그리고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4년 7월 스위스의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국제회의에서 채택한 로잔 언약에는 복음전도와 함께 정치사회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선언되었다. 1982년 6월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관계협의회(CRESR)>가 미국 그랜드 래피드

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복음은 뿌리이므로,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모두 그 열매이다"라고 선언되었다(Stott, 1985: 26).

교회가 넓은 의미의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스토티의 견해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고 예수님도 이러한 의미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셨다(Stott, 1985: 27). 그랜드 래피드 보고서가 요약한 바대로 인간의 궁핍 원인을 제거하고, 정치경제적 활동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 사이에 수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73년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최한 선교정책 연구협의회에서 참여자들은 "오늘의 구원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1) 경제정의 2) 정치적 정의 3) 인간소외에서의 극복 4) 인간의 삶에서의 절망에 항거하는 투쟁 등에서 구원의 사업은 행해진다"고 선언하고 있다(조승혁, 1994: 31).

정치적 실천 수단의 다양성은 사고가 잦은 교차로를 다루는 일과 유사하다. 현재 잘못된 교차로 때문에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만을 논의하는 위선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제도개혁의 비전과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소명이다. "진정한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사회봉사와 사회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다"(Stott, 1985: 28). 보다 완전한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 태도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중심으로 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다음과 정리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은 복음 그 자체에서 연역적으로 파생된다. 진실과 정의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애의 마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수행해야 할 신앙적 삶의 목표이다. 예레미야(23: 24-25)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실현하는 분"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정치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비록 스토트가 제기 하였으나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복음적 분업이라는 관점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중복적이면서 동시에 분업적이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모든 종류의 사역에 다 참여해서는 안 되고, 참여하려고 해서도 안 되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Stott, 1985: 47). 현실과 당위의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기능적 혹은 사회적 분업 형식의 복음적 분업은 바람직하다. 이는 바울 신학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바처럼, 인간은 그 속성상 분업을 할 때 마치 신의 손길이 참여한 것과 같은 효율성을 얻는다. 따라서 복음적 분업에 참여하는 기독교정치학자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학적 연구 주제에 몰입하는 것은 나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다. 동시에 어떤 정치학자가 자신의 주제도 책임 있게 다루고 역력이 있어서 다른 봉사활동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며 칭찬받을 만하다.

둘째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직업으로서의 정치학을 경멸하거나 자신의 탐구를 불성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양승훈이 요약하는 허만의 견해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정치학자 중에는 학문 연구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연구의 주제가 기독교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학문과 신앙을 분리하여 '기독교적' 학문을 개발하려는 태도를 가지는데 이는 건전한 태도가 아니다(양승훈, 2003: 253-54). 도리어 기독교정치학자들은 모든 주제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비밀을 파헤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확장해 나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는 학문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매개의 변증법'을 적극 회피해야 한다는 점이다(백종국, 2003b).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은 권력의 진실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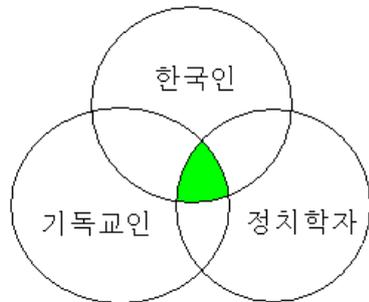
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매개자이다. 그러나 모든 매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여기에서도 매개의 강화가 진행된다. 정치학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더욱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역의 세련화와 신성화를 추구하게 된다. 비록 과학의 틀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진실의 발견조차도 수단의 필요에 종속시키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코드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정치학자들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본질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V.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역사적 책임

복음적 분업이 중요한 것처럼, 기독교정치학자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받고 있는 부르심 즉 복음의 역사성도 중요하다. 복음의 역사성이란 복음이 특정한 역사 안에서 구현되는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적 진리는 당연히 보편적이지만 이 진리가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뤄야 할 마지막 과제는 복음의 역사성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정치학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확고히 인지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역사성을 고찰해야 한다.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편적 차원에서 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역사적 차원을 가지게 되는 데, 이는 구체적 역사에서 나타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심판을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독교정치학자가 자신의 역사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보편성에만 머물러있다면 그가 파악한 사회적 책임의 건전성이 의문시된다.



<그림 2>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영역

정의 ①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의 학자
 정의 ②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위의 <그림 2>는 복음의 역사성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범주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기독교정치학자라는 개념에는 한국인, 기독교인, 정치학자라는 세 가지 범주가 중복되어 있다. 이미 기독교정치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 정의된 바 있다. 여기에 한국인이라는 영역이 추가되었을 때 앞서의 경우처럼 개념 형성에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학자에 초점을 두는 경우이고 후자는 한국적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경우이다. 전자는 학자의 정체성을, 후자는 연구 영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지 한국이라는 역사적 실존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도 동일하지만 기독교적 보편성을 염두에 두면 전자의 정의가 더욱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국기독교정치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의 학자를 말한다.

이 정체성의 영역 문제는 중요하다.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성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간혹 한국기독교정치학자가 마치 미국기독교정치학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본다. 만일 그가 미국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러한 전이(轉移)는 방법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미국적 사고와 기준으로 다루는 모습은 두 가지 점에서 건전하지 못하다. 첫째로 그는 미국적 사고와 기준을 보편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실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는 세속적 정치학자의 윤리적 기준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재론적 과학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정치학자가 자신이 처한 실존에서 출발하여 과학적 탐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탈구된 재구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이기홍, 2004: 55).

백완기의 『여는 매우 부적절한 결과성경과 민주주의』는 한국의 정치학자가 신앙적 조망을 통해 문제를 접근하는 대표적 저술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 그는 권력의 문제를 성경적 분석으로 조망하면서 성경의 제반 맥락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기쁨지고 견고한 길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백완기, 1999: 7).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자유, 평등, 사랑, 죄의식의 제 문제를 학자적인 자세로 천착하였다. 특히 죄의식에 대한 그의 분석은 매우 탁월하다. 죄의식에서 인간한계 의식이 출발하고, 여기에서 다수결의 원리, 권력분립과 임기제도, 정당제도 등이 출발한다고 보았다. 보편적 관점에서 이는 정당한 논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백완기의 연구는 그 연구의 몰역사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체적 삶에 대하여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의 연구 목적은 그의 신앙적 열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대로만 살면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백완기, 1999: 7). 명시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예

컨대, 기독교적 죄의식을 확고히 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피 흘림 없이 민주주의체제의 구성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무엇보다도 죄의식(기독교)의 수용을 둘러싸고 역사상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군사독재체제가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피 흘림을 요구할 때에 성경대로 살면 민주주의가 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외침이 얼마나 공허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그의 책 제14장에서 교회를 민주주의 학교로 간주하면서 현 장로교단들의 교회정치를 그 증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 몰역사성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현 한국 개신교회 교단들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틀에서 한참 벗어나있으며 거의 구교의 사제주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백종국, 2003a). 사실 교회정치는 다른 분야와 달리 기독교 정치학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 각자의 이론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성경적 기준을 확립하고 경험적 방법을 통해 현 한국 개신교회들이 이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완기는 아무런 조사연구 활동 없이 현존하는 교회정치를 교회에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들고 있다. 백완기의 연구는 한국 개신교회의 권위주의적 혹은 사제주의적 정치 구조를 정당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백완기의 연구가 공헌한 바는 한국기독교정치학자들에게 민주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구태여 수많은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각 있는 관찰자라면, 한국 정치가 군사독재의 시기를 거쳐 민주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이나, 발전단계, 지배연합의 재편, 국제화의 충격 등 다양한 변수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불안정하고 좀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수화는 과연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될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김영명, 2008). 이러므로 민주와 독재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공

교회는 여전히 한국기독교정치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 즉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한국기독교정치학자들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1994년 2월에 개최된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의 통합학회에서 이만열은 남북통일이야말로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하였다(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3). 복음주의적 지도자들이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분열되고 왜곡되어 있다.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핵 등의 문제는 남한 내부의 권력 획득 문제와 연결되면서 소위 "남남갈등"을 더욱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다수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공헌하는 바가 없다(윤영관·신성호, 2008).

성장과 분배의 문제 즉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은 점차 국제화해기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더불어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역사적 과제이다. 필자는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책임』에서 한국 사회가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신중상주의적 체제에서 천민자본주의적 체제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백종국, 1993). 이러한 천민자본주의화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특히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으로서 이끌었던 문민정부는 더욱 거침없이 천민자본주의화의 길로 내달았다. 이 결과 1997년에 외환위기가 닥쳤고 이 때문에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은 이미 한국 정부 자신이 여러 가지 공식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빈부 격차의 심화 혹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치열하다(이혜영·정인교·정남구, 2008).

이 글에서는 한국기독교정치학자가 직면한 복음의 역사성을 민주주의의 정착, 한반도의 평화통일, 그리고 천민자본주의의 극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현

법 개정, 국제적 테러의 해결,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 이민자의 국적 부여, 효율적인 환경보호정책, 국제기구와 NGO 지원, 지역주의 극복, 등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있다. 복음의 역사성은 학문적으로 열려있으나 반드시 특정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VI. 결론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실천에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구현으로서 기독교 정치학자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다 신뢰할만한 진실을 얻기 위해 진행되는 정직한 탐구, 전쟁보다는 평화, 독재보다는 민주, 불평등 보다는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특히 복음적 분업과 복음의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기독교정치학자들은 먼저 자신의 영역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세속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더 엄밀한 신앙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토화(ghettoization)"의 위험을 결론삼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기독교정치학자들은 이데올로기화한 신학적 주장을 조각난 과학적 지식으로 정당화할 위험성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적절치 못한 이원론과 반지성주의를 걱정하던 기독교 학문 연구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이데올로기화한 신학적 주장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정당화하는 데 열심인 모습을 보게 된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 남북통일의 이해, 기독교사학의 본질 등에 대한 논의에서 이러한 태도들이 자주 발견된다. 진실한 한국기독교정치학자

라면 한국 사회의 당파적 지지 여부에 자신의 견해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학문적 정직성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사회적 책임을 범하는 일이다.

둘째는 모든 학문 영역을 신학으로 환원하게 되는 위험성이다. 예컨대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기독교"라는 영역으로부터 연역된다는 점 때문에 어느 정치학자가 이 문제에 몰두할수록 자신의 학문 영역 보다는 신학적 토론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단순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느 땐가에 신학교 입학에 결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적 학문 영역은 지극히 방대하며 전문화되어 있고 이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전력을 기울여도 부족하다. 설사 신학교에 입학한다 할지라도 그는 곧 실망하게 될 것이다. 신학 내의 전문화라는 벽에 다시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는 무지의 자각과 함께 복음적 분업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

한국기독교정치학자들은 "게토화"의 위험에 대한 카이퍼의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 학자는 자신의 학문적 양심을 위하여 낙담의 불평에서나 신비적 감정에서나 비신앙고백적 활동에서 도움을 얻기보다, 우리의 원수의 정력과 철저함에서, 자신의 원리에 따라 사유하고 이 원리의 노선에서 모든 학문적 탐구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힘있는 연구를 출판계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겠다는 강렬한 자극제를 얻어야 한다.(카이퍼, 2002: 168-69)

이무리 신앙적 열정이 자신을 삼키려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업으로서의 정치학을 부여받았다면 이 영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 영역을 다른 영역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비성경적이며 불건전하다. 특정한 세계관의 틀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최태연, 2003; 김기현, 2003). 본 논문에서 다룬 것처럼 한국기독교정치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그 역사성 때문에 나열적이다. 우리가 마치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파악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인생의 특징이며 어쩔 수 없는 유한성의 비극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대한 검허하게 우리에게 발견되는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것이 한국기독교정치학자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IVP.
- 김광열 (2003),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성경적, 교리적 근거 모색," 『조지신학 연구』, 3, 181-210.
- 김기현 (2003), "개혁주의 세계관 비판과 변혁 모델의 다양성," 『신앙과 학문』, 8(2), 7-37.
- 김세윤 (2001),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 김영명 (2008), "이명박 당선과 한국 정치의 앞날," 『신진브리포트』, 9, 201-13.
- 백완기 (1999), 『성경과 민주주의-삶의 양식으로서 문화론적 접근』, 서울: 예영.
- 백종국 (1993),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서울: IVP.
- ___ (2003a),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 ___ (2003b), "매개의 변증법과 국가의 흥망," 『한국정치학회보』, 37(1), 431-49.
- 양승훈 (2003),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이기홍 (2004), "한국 사회과학의 논리와 과학성," 『사회과학연구』, 43, 39-57.
- 이승구 (2005),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개정판』, 서울: SFC.
- 이장원 (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조용한 혁명인가 요란한 구호인가?" 『국제노동브리프』, 4(4), 1-4.
- 이해영·정인교·장남구 (2008),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서울: 시대의 창.
- 전광식 (1995), "신앙과 학문의 통합-인문과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통합연구』,

8(1), 9-37.

- 전병길·고영 (2009),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서울: 꿈꾸는 터.
- 조승혁 (1994), 『한국사회 변혁 발전과 기독교 사회선교운동의 역할』, 서울: 정암문화사.
- 최태연 (2000),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학문』, 겨울, 133-47.
- ___ (2003), "벼랑 끝에 선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학문』, 8(2), 83-100.
- 통합연구학회 (1992), 『통합연구 합본호(통권 1~9호)』,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 APSA(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8), *A Guide to Professional Ethics in Political Science, Second Edition, Revised 1998*, Washington: APSA.
- Easton, David (1969),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4): 1051-61.
- Kuyper, Abraham (2002),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Marshall, Paul (1997), 『정의로운 정치』, 진웅희 역, 서울: IVP.
- Rosenau, Pauline Marie (1992),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tus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lvert, Kalman H.(1965), "American Academic Ethics and Social Research Abroad: The Lesson of Project Camelot," *Background* 9(3), 215-36.
- Sire, James W. (1994), 『지성의 제자도』,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Smith, Barbara, et. al. (1976), *Political Research Methods—Foundations and Technique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tott, John (1985),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ABSTRACT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Christian
Political Scientist

Jong Gook Bac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Christian Political Scientist." There are three dimensions of the subject. This paper approaches the subject by discussing each dimension one after another. Within the approach, there are various means of analysis such as the revolu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Calvinist world view, the personality of God, dial ion of labor in gospel, historicity of gospel, etc.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Christian political scientists is to perform the historical analysis and practil rof charity, justil rand honesty in Korea. For example, honest research activity,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consolidation of a democratic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just distributive system could be the historical calling for the Korean Christian political scientists.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warns of ghettoization as a danger that the Korean Christian political scientists could commit.

Key Words: the Korean Christian political scientist, Social responsibility, the Calvinist world view, Historicity of Gospel, Ghettoization.